

## 독도문제를 보는 한일 언론의 보도태도

때 : 2005.4.22~23

장소 : 제주KAL호텔

주제발표 : 구로다 야스히로(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소개받은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휘선택과 발음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년도에 기자생활을 시작해서 올해로 41년째입니다. 한국에서 기자생활을 한지도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이 제 고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애착도 더 갑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한국 언론에 요즘 제 자신에 대해 악의적으로 모략성 기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8백만원의 벌금도 내게 됐습니다. 2003년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일본문화의 이해' 라는 강좌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자 활동이 아닌 자격 외 활동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곳이 출입국 관리소가 아니라, 어떤 언론에서 문제 삼아서 출입국 관리소에 알려주어서 벌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 언론사의 생각은 자격 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케이신문 구로다 기자로서의 한국기자생활을 이념적으로 문제삼아온 언론 매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에도 비슷하게 보도되게 됐습니다. 처음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구로다 기자가 불법 취업이라고 나왔고, 그동안 여러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기사화 하며, 물의를 일으켜 온 기자라는 식으로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출국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

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9월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신문의 서울 지국과 지사가 강제 퇴거된 것이 80년 5월입니다. 광주사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토동신을 비롯해서, 산케이신문도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해 9월 제가 온 것입니다. 그 후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언론 자유가 100% 보장되게 된 상황 속에서 묘한 언론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4년 전 교과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일본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산케이신문의 계열사라고 해서,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이 산케이신문을 문제의 당사자로 삼아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민주투사였던 어떤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을 폐쇄하라는 주장까지 하셨고, 그 당시 매체들도 비슷한 성격으로 산케이신문을 추방해야 한다는 논평도 있었습니다. 20년 넘도록 한국 언론 상황을 지켜봤는데 지금도 그런 묘한 상황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신기자클럽이란 조직이 있는데 다음주에 외신클럽에서 독도 프레스 투어를 계획해서 가기로 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조이기도 하며, 한국정부에서 준비해 줘서 가기로 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특파원들은 갈 수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 기자들은 가지 못합니다. 과거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서 독도를 봤다는 식의 기사를 일본의 잡지와 신문에 썼는데, 그것이 일본 외무성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국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삼가하고 앞으로 그런 성격의 행사에는 가지 말라는 충고를 대사관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영토 문제에 있어 일본측의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안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주재 외신들에게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독도 프레스 투어를 준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독도는 분쟁지역이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 투어를 계획했다는 것을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옛날과 다른 도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언론 시각의 핵심은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에 관한 문제는 반세기 이상 양국 사이의 분쟁 과제로 남아 있고, 양국이 주장을 내세우고 일본측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왔습니다. 한국이 50년 넘도록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로 전쟁을 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측 국민들이나 언론 측에서도 한국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손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 데모하고 떠들고 언론화한다면 몰라도 지금 왜 다시 한국에서 떠들어서 문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것이 되어있고, 한국의 입장이 유리합니다. 불리한 일본측에서 떠든다면 몰라도 한국측에서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흐름을 볼때 독도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는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의 회가 전국적으로 독도문제가 관심사가 되어있지 않고, 현지 어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지방 의회에서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중앙 정부에 호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 2월이었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체 일본 언론의 흐름을 볼때 처음에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변두리의 지방 의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몰랐었고, 주한 일본 특파원들도 한국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일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떠들고 있으니 일본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강경 외교 노선이 발표되었고, 3·1절 행사에서의 발표문에서도 그랬고, NSC의 소위 '대일 독트린'이라는 강경 대일 정책 발표가 있었고, 노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에게 올리는 글' 등의 내용들이 독도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한일간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통령도 나서서 그러니 한국 외교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고, 이해가 안된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도 3·1절 연설문이 발표되었을 때, “알 수 없다. 국내 문제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대일강경책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에서는 일본 특파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일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의 리포터 기자들이 “다케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인터뷰를 해도 그 동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누굽니까”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그 동안은 70% 정도가 위치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 토론회를 하니까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전화 연결을 통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측 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얘기가 최근에는 놀랍게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0% 정도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70%가 몰랐는데, 지금은 70%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MBC 토론회에도 나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미 독도는 50년이 넘게 한국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것이며, 오히려 이렇게 여론화하면 일본 국민감정만 자극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일 국민들간의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부추기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언론이 ‘도발’ 했다고 하면서,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이 ‘도발’ 이라고 합니다. 그 후 주한일본대사가 외신클럽 토론회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일본 것이 아니냐”고 서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망언을 했다는 식으로 한국 언론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입니다. 시마네현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한국언론들이 시마네현에 많이 취재를 갔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될 때도 많이 취재를 갔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는 한국 언론의 뉴스를 봐도 현지 주민들도 관심이 없고 일부 정치인들만 그렇더라고 보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시마네현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사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동경에 올라가서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차원에서 제정해 달라고 몇 번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지 않다 보니 지방 의회에서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하자고 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시발입니다. 과연 이번 문제를 과연 일본이 도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마네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나 특히 일본 외무성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의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정부측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도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한국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카노 일본 대사가 서울외신클럽에서 말한 내용이 도발이라고 아주 요란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일본대사는 외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사의 자동차는 국기를 달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될 수 있는 한 외부행사도 취소하고, 식사도 관저 내에서 해결할 정도로 다카노 대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 언론의 덕분입니다. 다카노 대사가 질문을 받고, 어쩔수 없이 대답을 할 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 50년 전부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되풀이되어 온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왜 도발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대답을 안했다면 대사는 해임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고 해도 해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식적인 입장은 공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요란하게 망언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발적인 반일 운동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문사 사설을 보면 한국에 대해 친한적이고 양심적인 신문이라는 아사히신문조차도 사설에 있어서 다카노 대사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썼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국언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이번 독도문제에

대한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론, 나쁘게 얘기하면 ‘광기’, 좋게 얘기하면 한국 국민들의 ‘열정’, ‘열기’가 이해안가고 수수께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학자나 교수들도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썼습니다. 아사히신문에 실렸던 내용 중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일본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한국 언론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독자, 시청자, 국민들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마네현이 이런 움직임 보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는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분쟁이 있었고 일본이 그래서 저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 한국이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50년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자고 건의했는데 한국측에서 거부했다든가 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가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폭발적인 감정분출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독도문제가 감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언론의 균형 잃은 정보제공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독도문제를 보는 한일 언론의 보도태도

때 : 2005.4.22~23

장소 : 제주KAL호텔

주제발표 : 손태규(단국대 언론학과 교수)

모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 오셨는데 무거운 주제로 괴롭혀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

독도문제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첫째는 국가간의 영토분쟁이다, 또한 대상이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외교적 차원이나 안보적 차원문제뿐만 아니라, 언론 차원에 있어서도 국가분쟁, 특히 민족감정이 계재된 사안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많은 토론과 연구와 논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독도문제를 보는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에 있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독도문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애국적,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저널리즘의 정치적 중립위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을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 독도 문제같은 외교적 사안이 정부나 대통령이 여론 결집과 인기도 상승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호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전 캠페인에 언론이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있어 이번 독도문제를 보는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를 접근해 봤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있으면서, 미국 유학중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언론사 관련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저널리즘 스쿨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20여 년간 언론 생활을 한 사람들임

니다. 수업 방법이 언론사(史)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택해서 한 20분간 발표를 하는데 제가 발표한 것이 '미국 언론과 국익'입니다. 그 내용은 미국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언론 자유의 보장을 받는 나라이지만 국익에 관해서는 대단히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논조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호응도 좋았고 질문도 좋아서 이 정도면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하고 자신을 했었는데 며칠 뒤에 교수가 편지 상으로 학점과 코멘트를 보내왔는데 'B'를 줬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코멘트를 보니까 아주 비판적으로 왔습니다. 그 교수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수정헌법1조의 대가 중에 대가로 알려진 학자인데,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굉장한 업적을 이룬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성적을 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동양에서 온 촌놈이 코털을 건드렸구나,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할 학자조차도 국익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한국에서 기자생활도 하고, 현재 한국에서 학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미국 교수처럼 저를 오해하거나 비판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그럽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독도문제가 주는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애국적 국익과 애국적 저널리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익, 민족주의적 관점이 많습니다. 최근 CBS 앵커를 오래한 댄 래더가 은퇴했는데, 수 십년 동안 좌파로 알려져 보수로부터 비판을 받은 분인데 최근 미국에서 애국주의와 저널리즘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그 분이 방송에 나가서 9·11 이후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뒤에 서겠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병사가 다치는 일에 일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이 그 나라의 영토적 문제와 문화, 정치, 사회적인 문제의 제약 때문에 환경을 설정하는 제약여건에 따라서 규정을 받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히 애



국적, 민족주의적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 나라 국민, 사회의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는 보도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어긋나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언론이 될 경우에는 반역자, 배신자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국익에 관한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언론이 속한 영토의 문제 때문에 어느 언론이든지 나라의 이해와 이익을 지키는 보도를 해주기를 사회와 국민이 요구합니다. 이런 애국적 민족주의적 관점이 객관주의와 중립적 시각에서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새로운 하나의 편향된 시각이고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이 지고지순한 객관주의와 애국주의, 민주주의에 양립할 수 있느냐입니다. 객관주의를 포기하기 때문에 애국적, 민족주의적 언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을 누가 규정하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71년도에 팬타곤 저널리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수년간 전문가와 전문학자를 동원해서 맥나마나의 지시에 의해서 월남전을 수행하는 모든 정책적 자료와 작전자료를 모아서 그 작업에 참여했던 다니엘 엘스버그란 사람이 자료를 통제로 복사해서 뉴욕타임스에 썼습니다. 이걸 받은 뉴욕타임스에서 이걸 보도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사이에 미국 정부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법무장관의 이름으로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속한 재판 과정을 통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다. 들어주지 않는 대신 미국 정부가 말한 팬타곤 페이퍼가 공개될 경우 미국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오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요구하기를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뭘지에 대해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재판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역사상 길이 남을 명 재판이면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국익의 입장을 내세워 언론에게 국익적 언론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익에 관련된 정보의 독점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활용해서 언론을 정부의 선전도구가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

입니다. 언론적 관점에서 보면 국익과 관련된 보도를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같은 중대한 외교적 사안은 정부가 굉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개혁의 1순위가 무엇이냐는 문제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기자와 언론사가 깨끗해서 언론 개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정부와 정당, 대통령이 언론과 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정보를 가진 정치 집단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이 낮으면 아무리 기자가 깨끗하고 공정해봐야 던져진 자료가 식은 것이면 칼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의 1순위는 정보의 접근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교적 사안은 정보의 통제적 측면에서 여러 형태로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언론이 외교적인 사안을 동원해서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대통령이 외교적 계기를 이용해 인기를 올리는 사례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건이 똑똑하다기 보다는 그 옆에 언론전략에 관해 뛰어난 참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하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최고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라나다와 니카라과를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으로 강력하게 규정하는 수법이 대통령의 인기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 역사적인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교적 사안은 언론이 정부의 의도대로 말려들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 사안과 언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세 가지 형태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충실한 봉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복창 보도하는 언론이 정부에 대한 충실한 봉사자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애국적, 민족적인 보도태도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또 하나 ‘중개자’로서의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

가 주장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상당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한다든지, 외교적 갈등이나 위기에 대한 내부의 비판도 소화하는 언론을 중개자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복창 언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기사나 칼럼을 떠나서 스트레이트 보도의 경우,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하면 무리가 있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발언이기 때문에 크게 보도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개자 언론은 정부에 유리한 언론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자나 희생자를 위한 옹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관련되지 않은 상황, 테러나 국제적인 사안이 있을 때, 약소국의 편을 드는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애국적, 민족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언론이 궁극적으로 뭘 훼손시키느냐 하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직업주의와 객관적 보도라는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강의를 하면서 언론의 기능 중 뭘 제일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95%가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이라고 듭니다. 언론에 주어진 사명은 역시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치중립적인 정보 제공자, 관찰자의 기능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정파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대변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국가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에 동참해서 같이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본질과 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국가나 지역에 근거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세계관, 국가관, 현실관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만을 강하게 알려주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 국민들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양시킬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부의 주장을 복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장의 정당함이 무엇이며,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분노한 정부나 시민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리를 둔 목소리를 낼 필요

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보도는 언론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국민을 계몽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지나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국민적 감정에 편승한 보도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보도들을 조사했습니다. 많은 신문을 다 보진 못했고,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다르다는 4개 신문과 방송의 뉴스와 사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영유권 주장 이후 한달 여 간의 뉴스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객관성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애국적, 민족주의적 관점과 시각해서 보도했는지 분석했으며, 언론이 과연 정부의 충실한 봉사자였는지 아니면 중개자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 언론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명을 밝히지 않고 A, B, C, D로 구분을 했습니다.

애국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도했느냐, 아니면 객관성을 유지했는지를 보면, 단어 선택에 있어 대부분의 언론이 ‘망언’, ‘도발’, ‘야욕’ 등 상당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한국의 시각과 입장에서만 사안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로다 지국장께서 반기문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자체도 제 관점에서 보면 기자로서의 균형된 질문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의 경우도 ‘광기어린 공세’란 표현을 썼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문제를 보면, A신문의 경우,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진 설명이 있습니다. 애국적 시가 될 수는 있지만, 언론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A방송의 경우, “도발 배경에 미일간의 밀착은 없었는지...” ‘밀착’이라는 단어 선택도 상당히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일간의 밀착’이라는 표현자체가 민족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B방송의 경우 “15개월짜리 젓먹이도 험한 파도를 이겨내고 독도까지 왔습니

다...”란 앵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도 지나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일본의 신문 중 아사히신문은 이번 독도문제 보도에 있어 한국에 상당히 좋은 언론으로 부각됐을 것입니다. 구로다 지국장께서 아사히신문은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우익신문들도 아사히신문을 인용하고, 아사히 신문 특파원의 보도를 지면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균형 잡힌 보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이니치와 요미우리 신문도 인용을 했지만 양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너무 흥분해서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의 일본 측 주장과 근거에 대한 소개가 미흡하고, 일방적으로 “근거가 없다. 또는 희박하다”는 식의 보도도 그렇고,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기사 역시 일본 주장이 지나치게 무시되고 적게 소개돼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 균형감을 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충실한 봉사자로 보이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개 신문사와 방송의 경우,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D신문의 경우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태도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논거는 지극히 타당하다. 노대통령의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음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이지만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글을 띄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 신문의 경우 “국가원수로서 외교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 있으면 절제된 용어를 써서 좀 더 공식적인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이 더 무게가 있고 효과가 크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숨기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 D신문과 비슷하게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복창하고 이에 모자라서 앞서나가는 보도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문이 제기한 노 대통령이 직접 외교 일선에 나서는 비판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대신에, 반 장관 발언을 설명하면서 “정책의 어떤 전환을 가져온다든지 또 어떤 강력한 외교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국가원수의 메시지...”라는 식으로 반 장관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인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옹호해주는 보도태도가 충실한 봉사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개자’로 보이는 보도를 보면 신문의 경우 노 대통령의 발언의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는 언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이런 면에서 차별화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보도를 비교분석해보면, 편차는 있지만 방송의 경우 한두개 방송은 그런 방송과 너무 편차가 날 정도로 중개자 역할을 한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개 방송은 충실한 봉사자 역할을 하는 보도를 볼 수 있었고, 신문의 경우도 4개 신문 중 1개의 신문의 경우 충실한 봉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3개 신문과 한두개 텔레비전 방송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기조나 태도를 비판적인 자세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언론이 상당히 애국적이고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익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는 흐름에 있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보면 객관성을 상당 부분 잃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강하게 정부입장을 대변해주는 보도기관이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교적 사안, 특히 독도문제와 같은 국민감정이 무게가 실리는 보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한 발표에 대한 복창 보도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순응하는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미국 언론들도 반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언론도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에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 “당신은 한국인이 우선이나, 기자가 우선이나”입니다. 저도 외교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출입했었기 때문에 정부 관료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독도문제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고, 국가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대통령에게 조금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보다 더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며, 국익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들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주장도 알아야만 우리 정부의 주장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